

책머리에

“삶은 기억이다” - 기억을 넘어서 전망으로

“삶이란 기억이다. 살아가는 사람들은 늘 기억을 간직하며, 그 리하여 기억은 영구히 진화되어간다. 그것이 지속적으로 변형되 어왔다는 것을 알아차리지 못한 채, 기억하기와 망각하기의 변증 법에 지배되는 사람들의 기억들은 모든 종류의 조작과 활용에 무 기력하게 열려 있다. 그것은 오랫동안 잠재되어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복원되기도 한다. 역사는 더 이상 거기에 존재하지 않는 것들을 항상 미완의 형태로, 그리고 문제의식으로 재구성하는 것 이다. 기억은 항상 우리의 시간에 속하며, 영원한 현재와 더불어 살게 되는 끈을 만든다. 역사란 과거에 대한 상상인 것이다.”

(피에르 노라, 『기억의 장소』 1권, 1980, p. xix)

나는 오늘날 우리에게 기억이란 무엇인가, 혹은 기억의 장 소로서 역사는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다시 던지고 싶다. 왜냐하 면 촛불 이후 지금 한국 사회에는 기억을 둘러싼 투쟁이 진행 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기억투쟁은 정치화되고, 기억의 정치는 우리를 다시 역사 앞에 세우기 때문이다.

이전에도 기억투쟁이 있었다. 먼저 ‘과거사’ 문제가 거론됐다. 김대중 ‘민주정부’와 노무현 ‘참여정부’ 시절에는 해방정국과

한국전쟁, 그리고 민주화운동 인사들에 대한 국가테러가 문제화되고 진상규명 요구가 비등했다. 그리하여 건국이후부터 80년대까지 '의문사'의 부분적인 규명, 5.18 광주민주화운동특별법, 4.3학살에 대한 노무현 대통령의 사과 등이 이뤄졌다. 법제도적으로는 2000년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과 보상 등에 관한 법률'이, 2001년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이 제정되었고, 민주화운동 관련자에 대한 유공자 인정 등이 이뤄졌다.

그리고 이제 다시 기억투쟁이다. 제주학살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사과가 이뤄지고 4.3항쟁에 대한 보상문제, 4.3항쟁에서 배제된 '빨치산 희생자들'에 대한 배제 문제 등이 이어지지 않을까 했는데 그것은 흐지부지되고 있다. 민주화운동명예회복과 보상법이 민주화운동을 정치적 민주화운동으로만 좁게 규정하면서 여기서 배제된 노동운동 등의 포함 문제가 수면 위로 오를까 했는데, 오히려 전태일 등이 묻힌 모란공원 노동자 열사 묘역의 다수 묘기들이 국가가 인정하는 민주화유공자가 아니므로 관리비가 체납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온다.

'이명박근혜' 우파 연속집권기에 해체되거나 소극적이었던 과거사 규명의 완결이 이뤄질 줄 알았는데, 오히려 역사를 한참 소급하여 일본 제국주의 식민지시대의 항일운동을 둘러싼 평가 문제가 불거졌다. 느닷없이 조선의열단 단장 김원봉에 대한 대한민국의 공식 평가는 무엇인가라는 문제가 대두됐다. 하지만 이는 이미 예견된 것이기도 했다. 한편으로 올해는 3.1운동 100주년이다. 그리고 이는 임시정부의 수립 및 활동과 맞닿아 있다. 하지만 식민지 해방투쟁에는 또 다른 역사가 있다, 이른바 좌익의 항일무장투쟁을 비롯한 식민지 해방투쟁이 있었다.

대한민국 건국이 '식민지독립' 운동 과정과 분리될 수 없고, 현정부는 '87년 6월항쟁'으로 개정된 '87년헌법'에서 소홀히 했던 헌법 전문을 헌법정신으로 강조하고 있다. 이런 마당에 좌파의 민족해방운동을 배제하고서 대한민국 건국과 한국 현대사를 통합적인 역사로 쓰긴 어려울 것이다. 하지만 최근 6월 6일 현충일에 대통령의 공식 추념사에서 김원봉에 대한 언급은 놀랄만한 일이었고 정치적 쟁점화나 사회적 논란은 예견할 수 있었다. 일부는 이를 당연하고 규범적인 문제, 즉 올 것이 온 것이라고 말한다. 과연 그런가?

여하튼 지금 다시 기억투쟁이 시작되었다. 우리에게 국가가 만든 관제 기억들이 가득하다. 혹은 '국사'라는 이름의 역사뿐이었다. 한국사가 아니라 '국사'이고 한국어가 아니고 '국어'이며, 국민교육헌장을 외우고 국민학교에 다니며 '국민됨'을 교육받고 국민주체가 되었다. 그 과정에서 단일한 총화로서의 역사적 기억, 일종의 집체극의 기억이 우리에게 가득하다. 또 다른 한편으로 저항의 기억들, 제도 밖의 기억들이 있다. 전태일의 죽음에 대한 기억으로부터, 1980년 5.18 광주항쟁을 기록한 <죽음을 넘어 시대의 어둠을 넘어>, 그리고 87년 6월항쟁과 노동자대투쟁의 기억들이 있고, 그 이전에는 국가의 반민주적인 통치에 맞선 민중적인 저항의 역사에 대한 기억들이 있다. 여기서 돌출한 뉴라이트의 기억은 아마도 저항의 역사가 공식 역사로 편입되는 것에 대한 선제적 방어적 기억이라고 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제 다시 저항의 역사가 제도화되는 기억들로 소환되고 있고, 촛불정부 집권이후 관제성의 경계도 허물어진다. 과연 무엇이 제도적이

고 공식적인 기억인가. 저항의 기억은 어떻게 제도화되고 공식화되는가.

종국적으로 모든 기억투쟁은 기억정치이기도 하다. 모든 기억투쟁은 과거의 역사를 현재의 역사로 만든다. 그렇기에 언제 어떻게 왜 과거의 기억들은 소환되는가 자체도 질문되어야 한다. 왜 역사들은 여러 기억들로 채색되고 이어지는가. “그것은 오랫동안 잠재되어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복원되기도 한다”. 또 “기억하기와 망각하기의 변증법에 지배되는 사람들의 기억들은 모든 종류의 조작과 활용에 무기력하게 개방되어있다”. 모든 종류의 조작과 활용에 무기력하기도 하고 개방되기도 하는 바로 그 기억들. 우리의 현재적 시간에 속하는, 그래서 ‘현재적인 역사’이면서, 또한 ‘과거에 대한 상상’이기도 한 역사가 머무는, “기억의 장소”.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에 의거해 만들어진 연구소가 내는 잡지 이름이 『기억과 전망』이다. 이만큼 기억투쟁의 장소로 민감하고 적절한 ‘아레나(전장)’가 있을까. 이번 호에 수록된 논문들은 기억투쟁과 기억정치를 환기시키는 글들이다. 우리는 과연 이 기억들의 소환을 통해 어떤 ‘전망’을 가질 수 있을까?

올해는 공식적으로는 아직 ‘광주민주화운동’으로 표기되는 5.18 광주 민주항쟁 39주년이다. 그리고 여전히 새로운 사실들이 폭로되고 있다. 올해에는 가해자들의 폭로가 잇따르고 있다. 나는 어떻게 발발 40년을 바라보는 비극적인 사건에 대해서 피해자의 증언뿐인지, 가해자나 가해자의 손발이 됐던 이들, 공수부대원들의 증언은 없는지 신기했고 사실은 불편했다. 이 사회에서 그런 증언이 불가능하거나 혹은 증언하지 않아도

되게 만드는 집합심성이 있는 것일까? 하지만 가해자의 수괴도 사면한 마당에 그 수하들이 무엇 때문에 자신의 불편함을 무릅쓰고 증언을 하겠는가. 하지만 이제 가해자들, 공격자들이 입을 열기 시작했다. 그런 점에서 5.18 광주는 여전히 진행중이며 무엇보다도 이 사건은 한국 현대사의 국가적 비극, 국가테러에 대한 해결방식의 좌표같은 ‘사건’이다.

이런 측면에서 주목되는 것이 강인철의 논문 「사회극의 시각에서 본 광주항쟁」이다. 이 논문은 광주항쟁에 대한 일종의 ‘정치과정’적 분석을 통해서 광주항쟁의 현재성을 더욱 명확히 드러내고 있어 일독할만한 논문이다. 사회과학과 역사학에 생소한 빅터 터너의 ‘사회극(social drama)’의 개념과 방법론에 기초하여 필자는 광주항쟁을 사회극의 4가지 단계, 즉 위반 → 교정 → 위기 → 기존 질서로의 재통합 혹은 (항구적인) 분열의 도식에 따라 분석하고 있다. 광주항쟁의 계기가 되는 ‘위반’은 다른 사회극과 달리 저항세력의 질서 위반이 아니라 군부쿠데타로 시작되었고, 이후 군부와 저항세력이 공통적으로 여러 차례에 걸쳐 교정을 시도하였으며 그 교정의 실패가 위기로 치닫고, 결국엔 재통합보다는 분열이 비극적인 결말을 맺었다. 하지만 “광주 사회극이 (교정되기 어려운) 장기화된 ‘위기’로의 경향, 그리고 (재통합이 아닌) 사회의 ‘분열’로 종결되려는 경향을 강하게 드러냈”기에 광주항쟁은 4.19혁명과 달랐다. 4.19혁명이 정권의 축출에 성공했음에도 불구하고 이후 군부의 쿠데타를 막지 못했던 데 반해 5.18항쟁은 훨씬 강한 “적대”를 포함하면서, 좌절과 죄의식, 전국적인 추모의 공동체적 역사를 통해서, ‘5월투쟁’으로 기억되고 계승되었던 것이

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점은 5.18 광주항쟁이 한국사회에서 일종의 “역사적 뼈기”의 역할을 하게 됐다는 점이다. 제주 4·3, 여순사건, 그리고 한국전쟁을 전후한 수많은 민간인학살 사건과 관련된 무수한 유가족들과 피해자들이 광주항쟁에 대한 기억투쟁을 동력으로 삼아 각자 지난한 “역사투쟁에 임하는” 중이라는 평가에 동의한다.

이번 호 특집 제목은 <경계의 형성, 그 안과 밖>이다. 오혜민의 「어글리 코리안」의 마주침 사건과 타자의 형상들」은 어떤 타자에 대한 기억의 전복을 강하게 주장하는 글이다. 이 논문은 1965년부터 70년대 초반, 1980년대 후반 ‘어글리 코리안’이란 단어가 활용된 방식에 주목한다. 베트남 파병, 해외근무, 서울올림픽, 해외여행 자유화 등 큰 사건 때마다 유포된 ‘어글리 코리안’ 담론이 사실은 외교 정책 실패의 근본 원인을 가리거나 국가 통제 시스템을 합리화하는데 활용되었다는 것이다. 국가정체성에서 ‘비정상성’, ‘이탈형’에 대한 집단적 기억의 구성이 어떻게 기억의 정치에 활용되는가를 보여주는 흥미로운 사례연구이다.

반면 이상직의 논문 「또 하나의 근대적 라이프코스: 형제복지원 수용자들의 생애 구조와 시간 의식」은 배제된 자들의 수용의 역사와 그들의 기억투쟁을 다루고 있다. 60년대부터 80년대까지 존속했던 부산 형제복지원의 수용인들은 6세부터 10대후반이다. 생존자 31명의 생애사 분석을 통해서 필자는 근대사회의 라이프코스의 이중적 제도화라는 개념을 제기한다. 근대적 삶의 조건은 가족, 학교, 공장(노동시장) 제도의 틀에 따라 라이프코스가 표준화되는데, 바로 그 과정에서 누락된/탈락한 이들의

라이프코스가 시설이라는 또 다른 제도적 틀에 따라 표준화되는, 이중적 표준화 과정이 있다는 것이다. 필자는 이를 통해서 사회안의 '정상성'이라는 제도화된 틀을 문제화하고, 나아가 사회복지의 틀내에서 '시설'인이라고 불리는 이들에 대한 새로운 문제의식을 던지고 있다.

김명수의 연구논문 「1980년대 주거운동의 역사적 궤적과 자가소유(권) 정상화의 역설」은 필자의 박사논문의 일부를 보충하여 제출한 글인데, '부동산 공화국'이라고 일컬어지는 대한민국 사회에 대한 보다 정치하고 체계적인 사회과학적인 분석으로 보인다. 이 논문은 1980년대 말 주거 문제로 표출된 분배갈등이 어떻게 자가소유(권)의 정상화라는 역설적인 결과를 만들어냈는지를 검토한다. 필자는 1987~1992년을 '결정적 국면'으로 규정하고 주거 요구를 둘러싼 정치적 동역학을 시기별로 다루는 가운데, 어떻게 주거운동의 이중적 전환, 곧 주거(생존)권 운동과 소유권 운동이 '소유를 통한 타협'의 결과를 거치면서 자가소유권에 의존한 사적 생계가 도시민들의 지배적 생활양식으로 부상했는가를 분석하고 있다.

그 외에 「변영주 감독 영화 속 사회 비판적 메시지에 관한 고찰」(안정운, 함충범)은 한국영화계에 희소하게 상업적으로도 영화사적으로도 주목받는 여성영화감독인 변영주감독의 영화 〈밀애〉, 〈화차〉, 〈발레 교습소〉등 세 편을 통해서 '변영주 감독론'을 제시하면서 2000년대초 이후 여성주의, 신자유주의, 소수자의식 등을 논하고 있다.

또한 김남석의 논문 「1930년대 식민지 조선의 노동 현실로 바라 본

송영의 「호신술」과 그 기법의 의미」는 송영의 희곡 「호신술」이 노동자 파업을 직접적으로 그리는 것이 아니라 자본가의 우스꽝스러운 호신술 익히기 등 대응을 통해서, ‘무대밖’의 현실에 대해서 조선민중과 노동자들을 각성시키려 했다고 논한다.

이어 한 개의 대담형식의 회고록과 서평을 배치했다. 1980년부터 1982년까지 한국콘트롤데이터(주) 노조위원장을 역임한 한명희의 구술(유경순 면담 및 정리)은 1970년대와 1980년 전환기를 거쳐 1987년 남성노동자운동에게 자리를 내준 여성노동운동의 구술사 자료로서 의미가 있다. 70년대의 민주화사회운동사를 다룬 『저항 변증법: 국가의 억압과 한국의 민주화운동, 1970-1979』(*Protest Dialectics: State Repression and South Korea's Democracy Movement, 1970-1979*)에 대한 홍성태의 서평은 미국의 한국학 연구자인 폴 Y.장의 저서로, 한국민주화운동을 대체로 70년대 후반부터 그리는데, 70년대 십년간 유신체제의 성립부터 몰락기까지를 추적하는 연대기적인 의미가 크다.

최근 구 치안본부 대공분실(남영동) 활용방안에 대한 논란이 서서히 제기되고 있다. <쟁점> 코너에 실은 이동기의 「민주인권기념관」건립 구상: 10개의 테제」는 「테제」라는 제목 그대로 어떻게 ‘민주인권기념관’을 만들 것인가에 대한 원론적인 선언을 10가지로 제시하고 있다. 하나하나 생각해볼 항목이며, 굳이 결말을 공유하지 않더라도 의미있는 문구라 생각해서 부분 인용한다. “우리는 모든 차원과 영역에서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민주주의의 최대치를 문화적으로 실험하며” 기억투쟁에 임해야 한다. ~~다.~~

2019년 6월
편집위원회를 대표하여
권영숙 씀